

인구, 가족, 사회 - 도구적 재생산에서 가치적 재생산으로

장경섭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일·가정 균형(work-family balance)’, ‘일·생활 균형(work-life balance)’ 등에 관한 사회적 요구와 정책적 문제의식은 이제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현대 한국인의 삶에서 장시간 노동 등 과도한 경제활동 집중성에 수반된 광범위하고 만성적인 개인 생활 교란에 따른 시민적 불만과 불안이 극심하며, 이에 대해 국가, 기업 차원의 고민과 배려가 당연시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인간적 삶의 가치에 대한 사회 보편적 공감과 책임의 일부이기도 하겠지만, 좀 더 직접적으로는 일상화된 개인 생활 교란이 집합적 차원에서 경제 체제와 국가 기반의 구조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반영한다. 비혼·만혼·이혼의 급속한 확산, 세계 최저 출산율, 청년과 노인의 선진권 최고 자살률 등은 인구 규모의 급감, 인구구조의 불균형 등을 통해 경제,

국가, 민족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차원에서 경제, 국가, 민족의 재생산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사실, 사회 재생산의 위기는 먼저 개인·가족적 차원에서 발현된다. 가장 기초적으로는 인간의 생명과 노동력이 적절한 영양, 휴식, 보호, 수면 등을 통해 하루하루 재생산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시민들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며, 심지어 직업, 계층, 지역, 세대에 따라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여러 세대에 걸친 한국인들의 자살 급증은 스스로의 생명을 더는 재생산하지 않겠다는 극단적 결정에 다름 아니다.

나아가 새로운 인간 생명의 탄생, 즉 출산을 통한 생명의 세대 간 재생산에 대해 한국인들이 이미 세계에서 가장 소극적인데, 그 소극성이 갈

수룩 심화되고 있다. 이는 그 전 단계로서 비혼, 만혼, 이혼의 급증과 무자녀 혼인의 확산 추세와 맞물려 있다. 자녀 출산이 대부분 (법적) 혼인을 전제로 이루어져 왔음을 감안하면, 혼인의 다면적 위축과 교란은 출산율의 급락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최근 혼인 후 무자녀 선택의 확산이 이 추세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들은 모두 세대 간 생명 재생산 제도로서의 가족이 안정성과 보편성을 상실하고 있음을 말한다.

자녀 출산과 별개로 가족은 그 자체로 가장 보편·핵심적인 사회 구성 요소로서 안정적인 일상적 재생산과 (자녀 혼인을 통한) 다음 세대로의 승계적 재생산이 개인, 사회, 국가 차원에서 모두 절실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세기 말부터 농촌 각지와 대도시 주변부에서 많은 남성들의 비자발적 비혼 상태가 지속되고, 21세기적 추세로서 청년층 남녀의 비혼 의지 확산과 혼인 준비 곤란이 더해져, 한국인의 성인기 진입이 더 이상 당연한 가족 형성으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게 되었다. 여기에 독거노인 급증이 더해져 이른바 ‘일인 가구’의 충격적 폭증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다면적인 생명, 가족, 인구 재생산의 위기에 따라 한국의 인구 변동 통계치들은 산업화와 경제 성장에 못지않게 세계적으로 극단적인 수준을 기록해 왔다. 이러한 경제·인구 변화의 동시적 급진성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경제적 생산과 사회적 재생산 사이의 체계적 상호관계를 반영한다.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 노동자화는 세

계 각지에서 핵가족화, 개인화,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이어졌다. 다만 한국의 경우 이러한 변화가 거의 비교 대상이 없을 정도로 급진적이었다.

이러한 압축적 과정을 거쳐 한국은 유엔이 공인하는 ‘선진국(advanced nation)’이 되었는데, 저출산, 고령화, 탈가족화, 돌봄 공백, 고용 불안, 양극화 등 이 지위에 사회·경제적으로 수반된 이른바 ‘신사회 위험(new social risks)’들에도 압축적으로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위험들은 결국 개인(생명), 가족, 인구의 사회 재생산 위기를 내포하는데, 이에 대한 사회 정책적 대처가 서구 복지국가의 핵심적 개혁·보완 과제로 공유되었고, 한국 정부와 학계도 이를 면밀히 검토해 왔다.

그런데 사회 재생산 위기에 대한 한국의 지배적 문제의식은 산업·복지·재정적 차원의 문제 예방·대처라는 도구(주의)적 성격이 극명하다. 이는 정부 차원의 정책적 불가피성이 있지만, 그동안의 사회 재생산에 대한 도구적 접근 자체가 오늘날 사회 재생산 위기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깨달아야 한다. 이러한 접근에서는 개인, 가족, 사회 공동체 차원의 사회 재생산 과정 자체가 인간의 행복과 공동체의 안녕을 구성하는 본원적 가치를 갖는다는 사실을 망각하기 쉬우며, 특히 개발(지상)주의적 국정정의 효과성이 급속히 축소된 오늘날 시민들의 사회 재생산 동기와 노력을 활성화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한국의 압축적 경제·사회 발전 과정에서 사회

재생산에 대한 도구적 접근의 최대 모순은 사회 재생산의 필수 자원 자체를 생산 과정에 집중 전용하는 행태가 국가, 기업, 지역사회, 가족, 개인에 이르기까지 보편화되었다는 것이다. 심각한 수면 부족과 건강 훼손이 불가피한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과 학습시간, 주거시설·생활환경·생태 공간에 대한 무차별적 개발·투기 행위, 산업 현장과 사회기반시설의 위험 수용·방치적 운용, ‘복지 지체국’ 오명을 초래한 국가 재원의 경제활동 일변도 투입, 자녀 교육·사업을 위한 노후 생활자금 소진 등 보편화된 현실은 세계가 괄목할 만한 한국의 경제발전이 상당 부분 사회 재생산의 다면적 희생·왜곡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뜻한다.

개인·가족·인구(민족) 차원의 복합적 사회 재생산 위기를 모두가 우려하는 오늘날 이러한 사회 재생산 희생적 생존·발전 전략의 역기능성과 몰시대성에 대해 이견이 없을 것 같지만, 수많은 위정자, 경제인, 나아가 생활시민들조차 ‘경제위기’나 생활고를 이유로 근본적인 변화의 길로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최근 들어, 미진한 변화조차도 되돌리자는 정치적 제안이 이어지고 있다.

개인, 가족, 사회 공동체의 사회 재생산 자체가 인간의 행복과 공동체의 안녕이라는 본원적 가치를 갖는다는 인식을 모두가 공유하고 국가 정책, 경제활동, 사회관계 등에서 그 가치의 실현이 극대화되도록 철학적 각성과 정치(정책)적 전환이 함께 필요하다. ■